이태원 참사 유족 "검찰, 김광호 기소해야"

"대검, 구속영장 청구 거부 등 수사 방해해"
"김광호, 지휘권 행사하지 않아 158명 사망"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22일 검찰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기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시민대책회의(대책회의)는 이날 오전 11시께 마포구 서울서부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현장 대응의 실질적 책임자는 김 청장"이라며 유가족 130여명 명의로 김 청장에 대한 기소 촉구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이들은 의견서에 "김 청장은 지휘권한을 행사해 사전에 인파 관리 계획이 제대로 세워졌는지 확인하고, 미비한 점이 있으면 이를 보완하도록 지시했어야 한다"며 "하지만 김 청장은 지난 2022년 10월경 화상회의를 통해 추상적·포괄적인 지시만 하였을 뿐, 이후 별다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인정될 수 있다"고 적시했다.

또 "김 청장은 적어도 4차례 이상 이태원 핼러윈 축제 때 사전 인파 관리 계획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아 최소 158명이 사망하고 294명이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김 청장은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정민 유가협 운영위원장은 "검찰 수사팀은 김 청장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보다 더 큰 권한과 책임이 있고 참사를 예견하고도 방치한 정황이 뚜렷해 구속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그러나 대검찰청은 시간이 많이 지났고 신병 확보가 불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팀은 불구속 수사로 수사하려 했으나 이마저도 대검찰청에서는 내용을 보강하라며 제동을 걸고 윗선 수사를 방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이유가 더 가관이다. 유례없는 참사라 신중히 판단하기 위해서이고 해외 사례에서 청장급이 책임진 일이 드물다고 변명한다"며 "시내 한복판 길에서 걸아가다가 사망당하는 일은 흔한 일이냐"고 비판했다.

김희면 기자

'미 기업 대표 행세 온갖 사기' 교포 자매, 송치 뒤 후속 수사도 물살

'투자 이민' 43억 대 사기로 언니는 구속 송치, '공범' 여동생 검찰로
송치 이후에도 고소 2건 접수…어학연수·연구 참여 빌미 피해 호소

미국 의료기업 한국지부 대표 행세로 투자 이민, 해외 교환학생 등 온갖 빌미의 수십 억대 사기를 일삼은 50대 교포와 그 여동생에 대해 경찰이 추가 수사에 나선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한 미국 교포 여성 A(50)씨와 함께 검찰로 넘겨진 공범 A씨 동생(44)에 대한 고소장 2건을 추가 접수해 수사한다고 22일 밝혔다.

고소인들은 A씨 자매가 지역 내 영어학원을 통한 해외 어학연수 알선, 유전성 질환 연구 참여·치료 보증금 등을 빌미로 돈만 챙겼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자매가 미국 의료계에 영향력이 있는 교포라는 점을 과시하며 접근했다는 점에서 앞선 투자이민 사기와 수법이 비슷한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구체적인 피해 금액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피해자 다수가 저마다 수 천만 원씩을 A씨 자매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A씨 자매가 2017년부터 2년여 동안 전문직 종사자 등 4명으로부터 투자 이민 알선 등을 빌미로 미국 모 의료기업 투자 명목의 43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를 규명, 나란히 검찰에 넘겼다.

경찰 수사에서 A씨는 "미국 의료 제조기업에 지분 매입 형태로 투자하면 투자 이민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자녀의 영주권 취득도 가능하다"고 속인 뒤 끌어들인 돈만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해당 미국 기업의 한국총판 대표임을 거듭 자임하며 피해자들을 광주시와의 지역 설비투자 협의 과정에 동석케 하거나, 현지 공장 견학도 할 수 있도록 주선·안내했다.

지연·학연을 매개로 인맥을 과시하거나 확신에 찬 언행 등으로 피해자들을 교묘히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 일부는 A씨가 미국 대학 입학 허가증까지 날조했으며, 친분 있는 유력 인사를 교묘히 이용했다고 이야기한다. 또 가까운 가족들도 A씨의 학력 위조 거짓말을 거들었다고 한다.

'코로나19 입국 제한과 맞물려 현지 입학 허가 절차가 까다롭다' 등의 말로 거듭 속이며 허위 증빙 서류 또는 가짜 전화 인터뷰까지 꾸며냈다는 의혹도 나왔다.

경찰은 이미 검찰로 넘긴 A씨 자매의 또 다른 사기 행각에 대해서는 추가 접수된 고소장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본다.

경찰은 A씨 자매의 또 다른 혐의가 입증되면 관련 수사결과보고서를 검찰에 추가로 넘길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광주경찰청에만 접수된 추가 고소장은 2건이다. 고소장 검토를 마치는 대로 고소인 조사부터 시작한다. 현재까지 피고소인은 A씨 자매 뿐으로 추가 입건자는 아직 없다"면서 "자세한 수사 사항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오유나 기자

가로수에 겨울옷을 22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청 인근 인도에서 자원봉사자들이 가로수에 겨울옷을 입히고 있다.

檢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사무실 압수수색 진행

검찰이 SM(에스엠) 엔터테인먼트 인수전 과정에서 시세조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전 김 센터장의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15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센터장과 홍 대표, 이진수·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등 총 6명을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김 센터장 등은 지난 13일 구속 기소된 배재현 카카오투자총괄 대표 등과 함께 SM에 대한 기업지배권 경쟁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총 2400억여원을 투입해 SM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인 12만원 이상으로 상승 또는 고정시키려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받는다.

특사경은 이들의 범행이 내외부의 통제를 받지 않은 비공식적인 의사 결정 절차로 진행됐다고 봤다. 법무법인 등을 통해 범행 수법이나 은폐방법을 자문받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특사경은 카카오와 카카오엔터에서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경찰에서 수사한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보완수사도 진행할 것"이라며 "보완수사 범위엔 소환조사도 포함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선옥 기자

해양경찰교육원, 'VTS 교육훈련센터' 신축 준공식

해양경찰교육원은 지난 17일 여성수 교육원장을 비롯해 강철웅 여수 도선사협회 부회장 등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VTS 교육훈련센터'신축 준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슬비 기자

완도해경, '찾아가는 섬마을 행복海 행정서비스' 실시

완도해양경찰서는 지난 16일 완도군 보길면 예작도에서 도서지역 주민 고충해소 및 편익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섬마을 행복海 행정서비스'(이하, 이동민원실)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완도=기동취재본부

고흥경찰, '유관기관과 함께하는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펼쳐

고흥경찰서는 지난 17일 고흥읍 청소년문화의집 등 2개 장소에서 고흥군·고흥교육지원청·고흥나누리상담센터 등 유관기관 총 50여 명이 참여해 아동학대 예방 합동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고흥=기동취재본부

나주경찰, '23년 경학실습학점제' 수료식 개최

나주경찰은 최근 '경학실습학점제 8기' 교육과정을 이수한 동신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학생 12명에 대한 수료식을 개최하였다. 나주=기동취재본부

강진소방, 강진119생활안전순찰대와 의용소방대 취약계층 협업

강진소방서는 16일 119생활안전순찰대와 신전면 의용소방대"마을지킴이"와 함께 강진군 신전면 용정마을을 방문하여 화재 취약계층 대상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강진=김영일 기자

담양소방, 전문의소대 직무교육 및 간담회 개최

담양소방서는 지난 16일 담양군 의소대 연합회 사무실에서 전문의소대 상대로 직무교육 및 간담회를 가졌다. 담양=박종영 기자